



/ 특 / 집 /

사면초가의 쌀 농업, 어떻게 해야 하나?

‘적정생산 · 경쟁력 제고 · 고품질’ 통한 농업 활로 찾아야

‘자포니카’ 전세계 생산량 6% 불과, 식량무기화 호재 중 호재
‘쌀 재협상’ 최악상황 가정, 논란보다 정부에 힘 실어줘야

쌀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급격한 소비 감소 속에서 생산 감축은 여의치 않고 재고미는 창고마다 넘쳐 나고 있다. 농민들은 그래도 쌀농사 밖에 없다며 모를 내고 있지만 쌀값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2004년 쌀 재협상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개방 수용여부를 놓고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악재만 널려있는 우리의 쌀 농업은 지금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급격한 소비감소가 쌀 과잉 불러

요즘 도시사람들은 통 밥을 먹지 않는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예사고 아이들 돌주발 보다 적은 밥공기 하나를 해치우지 못한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아침은 아예

거르고 낮에는 햄버거나 피자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끼를 때우는데 익숙해 졌다. 여기에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열풍도 쌀 소비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쌀문제는 소비감소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사상 최저수준인 88.9kg이다. 2000년의 93.6kg에 비해 무려 5%나 감소했다. 농민들은 137.5kg을 먹은 반면 도시민들은 84.5kg에 그쳤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추세는 매년 계속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사이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쌀 소비량은 1980년 132kg에서 1990년 119.6kg로, 1998년엔 99.2kg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는

96.9kg(2.3%감소)으로, 2000년엔 93.6kg(3.4% 감소)으로, 2001년에는 88.9kg(5%감소)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최근의 3~4kg의 감소 폭은 일본이나 대만의 연간 1인당 평균 감소량 2kg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4천만 국민들이 한해에 4kg씩 덜 먹으면 대략 200만섬 정도의 쌀소비가 줄어든다. 소비 쪽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생산 쪽에서는 탄력적인 대응을 전혀 못한 것이 오늘의 쌀과잉을 자초한 원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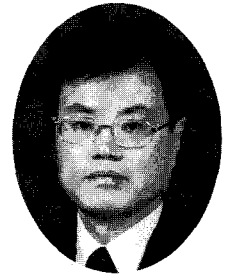
야속한(?) 6년 연속 쌀 대풍

농림부는 90년대 들어 2년의 흉작을 겪었다. 93년과 95년의 냉해로 3,200만섬 수준으로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88~93년까지 연간 1,000만섬이 넘는 재고가 단번에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사상 최대 재고량을 기록한 91년의 경우 창고에 쌓인 연말 재고는 1,487만섬에 달했다. 그 많던 재고미가 두 번의 흉작으로 96년엔 적정재고량인 550만~600만섬을 크게 밑도는 169만섬으로 줄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쌀 수입확대가 거론될 정도로 위기상황으로 받아 들였다.

이후 정책은 노는 땅에 벼를 심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쌀 증산정책으로 선회를 한다. 증산시책이라기보다는 적정생산 유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쌀 재배면적 105만ha, 3,600만섬 생산이 움직일 수 없는 정책목표가 된 것이다. 다소 재고가 쌓여도 기상이변 등 흉작에 대비하자면 선불리 감산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정책에 힘입어 쌀 생산은 96년 3,697만섬을 시작으로 2000까지 연평균 3,670만섬이 생산됐다. 그리고 2001년엔 사상 최대의 대풍인 3,830만섬을 기록했다. 정부는 5년 연속 대풍이라

고 했지만 실상은 96년부터 6년간 연속 풍작이다. 연간 소비량이 3,400만~3,500만섬인 점을 감안하면 6년에 걸친 수급불균형의 결과는 과잉재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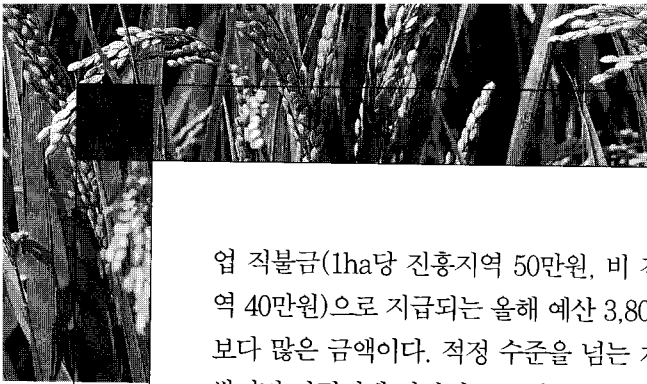
오 덕 학
농민신문사 편집부국장

풍작의 반(反) 경제학

쌀이 모자라면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민심은 흥흥하고 달러를 꿰오더라도 부족한 쌀을 수입해 국민들이 배를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자포니카 타입(중단립종) 식용쌀의 국제 유통량은 별로 많지 않다. 전세계 생산량의 6%내외에 불과하다. 당연히 국제값이 뛰게되고 수출국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식량이 무기화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지난 80년 노풍피해로 쌀이 부족했을 때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쌀 재고량은 989만섬이다. 대북지원 등 재고미 소진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올해는 1,380만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쌀 재고율이 1%P가 올라가면 시중 쌀값은 0.4%가 하락한다. 지난해 재고율은 28.6%에 달한다. 수확기에 쌀값이 10%가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은 1조원이 감소한다. 지난해 산지 쌀값의 하락폭이 8%라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8,000억원을 농가에서 손실을 본 것이다.

재고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100만섬의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450억원에 달한다. 작년말 재고량이 989만섬이니 재고관리 비용만 해도 줄잡아 45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금액은 논농



업 적불금(1ha당 진흥지역 50만원, 비 진흥지역 40만원)으로 지급되는 올해 예산 3,8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적정 수준을 넘는 재고가 쌓이면 단정기에 쌀값이 오르지 않아 민간유통 기능이 무력화된다.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계절진폭(수확기 대비 단정기의 가격 오름폭)은 8%수준이다. 지난 99년엔 7.9%의 계절진폭이 발생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엔 3%에 불과했고 올해는 1.3%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양곡상 들은 쌀 매입을 기피하고 농협의 RPC는 누적되는 적자로 수확기에 쌀 매입 여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허덕이는 것이다. 현재 농협의 199개 RPC중 158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농협 RPC가 2001년 한해동안 기록한 적자는 437억원에 달한다. 98년~2001년 사이에 민간 RPC도 20여곳이 부도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택의 여지 없는 생산 감축

이같은 쌀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생산을 소비에 맞춰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와 농협 등이 학교급식을 늘리고 “쌀밥 먹고 힘내자”는 식의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추세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UR이후 쌀 재배 면적은 연평균 5,000ha씩 늘어났다. 96년 105만ha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7만2,000ha, 2001년엔 108만3,000ha로 확대됐다. 정부의 증산시책 탓도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 농사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농민들이 쌀 농사에 매달린 탓이다.

95년 대비 2000년의 농업소득은 평균 4.0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쌀소득은 42.34%가 증가했다. 그 결과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년 49%에서 2000년엔 52%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쌀 재배면적의 축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정부는 올해 쌀 재배 면적을 104만3,000ha로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요지부동이다. 재배의향 조사결과는 106만ha로 나와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쌀 생산 감축이 여의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쌀생산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쌀 소비가 2004년엔 3,200만섬(이중 주식용은 2,700만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논은 100만ha 정도면 충분한 것이다.

선택 아닌 필수... 쌀 농사의 구조조정

지난 10여년 동안 알게 모르게 쌀 농사도 규모화와 대농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1990년 농가호당 평균 논 면적은 1.37ha에서 95년 1.75ha로 2000년엔 2.12ha로 확대됐다. 2ha이상 농가의 논면적 비중도 90년 16.8%에



서 2000년엔 33.6%로 늘어났다.

쌀 생산농가의 경영주 55%가 60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력이 달리는 농가들의 은퇴는 불가피하고 이같은 현상이 규모화로 연결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0년엔 60%이상의 논이 2ha이상 규모계층에서 경작이 되고 농가평균 재배규모는 4ha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생산규모가 커지면 생산비는 자연히 떨어진다.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0.5ha 농가의 80kg 가마당 쌀 생산비는 103,000원인데 비해 10ha 농가는 83,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규모화에 의한 쌀 농업의 재편은 우리 쌀 농사의 가장 큰 과제인 경쟁력을 높이고 쌀 수입개방 확대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의 방향도 당연히 쌀 농업의 구조조정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변수, 쌀 재협상

우리 쌀 농업의 대외적인 변수는 쌀 재협상이다. UR협상에서 우리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쌀 시장을 부분 개방했다. 쌀 시장의 개방을 유예하되 국내 쌀 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쌀 시장 개방

유예를 받은 시한이 2004년이다. 따라서 2004년 1년간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쟁점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늘려주더라도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유예 받을 것인가, 아니면 쌀을 관세화로 전면 개방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이다.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려면 수출국들이 당연히 요구해 올 최소시장접근 물량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등 수출국들은 아마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 즉 쌀 시장 개방과 맞먹는 정도의 수출물량을 보장받고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싫으면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관세화 개방을 단행했다. 관세화로 개방을 할 경우 우리가 수입쌀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400%정도에서 시작해 매년 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 정도의 관세부과로는 미국이나 중국 쌀과 가격 경쟁에서 절대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 400%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입쌀 값은 제비용을 합쳐 80kg 가마당 10만~12만원정도가 된다. 정부의 고민은 두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단정짓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던 지금보다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란 점이다. 농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그래도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6~8%정도에서 선방을 해준다면 그것이 낫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자신이 없어 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쌀 재협상에 대한 논란보다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세화 개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쌀 농업의 활로를 찾는 일이다. 그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 생산감축을 통한 적정생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와 논농업직불제 확대, 그리고 수입쌀과의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이다. 가야할 목표는 분명한데 그 방법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쌀 농업이 안고 있는 고민인 것이다. **농약정보**

